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박근혜 퇴진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반납하라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교육선전실 Views 3151

박근혜 퇴진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반납하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에겐 불통독재였지만 최순실과는 권력을 공유한 내통관계임이 드러났다. 국민주권을 비선 섭정권력이 농락한 사상초유의 헌법파괴 범죄이다. 민심은 참담함을 넘어 폭발직전의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이 총횡무진 국정을 농단한 지난 4년 참으로 많은 참극이 벌어졌다. 세월호가 침몰했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흡수통일 구호가 나오며 대립은 격화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 모두가 반대함에도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었다. 재벌자본의 검은 돈이 권력자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청부 노동계약이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가 밀실에서 결정되었다. 아버지의 한일굴욕협상을 뛰어넘는 한일 위안부 아합이 그 딸에 의해 이루어졌다. 쌀값공약을 지켜라 요구하며 거리에 나온 70대 농민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폭압과 폭정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관련이 없다는 어떠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드러난 비선 밀실권력의 국정개입과 농단만으로도 박근혜정권의 모든 불법적 정책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헌법파괴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색원 하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선 퇴진이다.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는 시간은 증거인멸의 시간이고 은폐와 조작의 시간이다. 박근혜의 검찰은 중범 최순실을 앞세워 주범 박근혜를 숨기는 퍼포먼스를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해온 부패한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민심호도 국민무시 정치공작이다. 10월 31일 여론조사결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찬성은 17%에 불과하고, 국민의 80%는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즉각 퇴진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은 박근혜를 위한 중립과 수습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주권을 농락한 자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새누리당은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고, 야당들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국회권력으로 야합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에게 묻겠다.
전 세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롱하고 있는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권력을 통째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도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결정에 비선실세 개입의혹이 난무하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최순실과 그 패당들이 청와대를 좌우지 하며 행정권을 농락했는데 정부의 수반이 맞는가?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하야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중에 의한 역사의 심판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확인한 바 있다.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었다.

우리는 오늘 시국농성에 돌입하면서 매일 이 곳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힐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행진이 진행된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농락당한 국민주권을 국민의 힘으로 되찾자.

한명이 말하면 욱이지만 10만이 모이면 민심이 되고 100만이 모이면 국민의 명령이 된다. 11월 5일 10만의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으로 다시금 민심을 보여주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에게 준엄한 국민의 퇴진명령을 내리자.

1% 권력과 자본이 아닌 민중의 단결된 힘이 부당한 역사를 바꿔 왔음을 보여주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List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